

의안 번호	237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24. 12. 2.(월)
-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12. 2.(월)
-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12. 18.(수)

2. 제안이유

- 근거 규정 없이 명시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인감 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 따라 재해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해보상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내 인감증명서 문구 삭제

4.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5. 검토의견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 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으로 인한 질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제출하는 재해보상 청구서와 관련하여 별지 제9호서식(요양, 장해, 장제, 유족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자연재해대책법」

-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